



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 규 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keiokim@kiep.go.kr, Tel: 3460-1017)

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김 은 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이 동 은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derhee@kiep.go.kr, Tel: 3460-1151)

1. 개관
2. 일본 대지진의 피해 현황 및 대책
3. 한신대지진 사례
4.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과 전망
5.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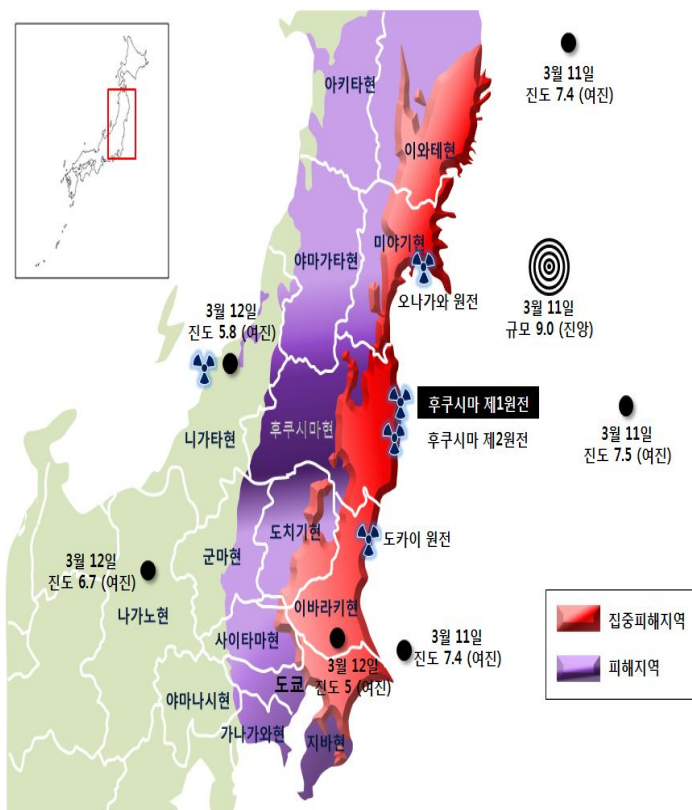
- ▶ 3.11 대지진(M9.0)은 쓰나미와 원전사고를 동반한 일본 사상 최대의 재난
 - 3월 28일 현재 인명 피해는 사망 11,004명, 행방불명 17,339명임.
 - 특히 원전사고는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에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방사능 오염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 3.11 대지진의 직접적 피해액은 1995년 발생한 한신대지진 때보다 2.5배 많은 약 25조 엔으로 예상됨.
 - 산업피해는 자동차, 전자, 정유, 철강업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파손과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완전 회복에는 향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 ▶ 3.11 대지진의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역시 클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2011년 GDP는 1% 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 피해범위 및 규모, 성격 등에 비춰 과거 한신대지진 때와 달리 정부의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총수요 진작효과가 즉각 발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은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3.11 대지진의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는 엔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
 - 일본의 장단기 금리는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엔고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G7의 외환시장 협조 개입으로 엔고 추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당분간 엔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우리 정부는 3.11 대지진을 계기로 환율정책, 원자력 발전 전략, 한·일 경제협력 기조를 재점검해야 할 것임.
 -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엔고 추세가 초래할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와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전략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기업 간 상호보완관계 유지, 제3국 공동 진출 등과 같은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1. 개관

가. 3.11 대지진의 개요

- 이번 3.11 대지진은 규모 9.0(M9.0)으로 일본에서 지진이 관측된 이래 최대를 기록함.
- 진원지는 동북지역의 미야기현에서 130km 떨어진 해저(북위 38.1도, 동경 142.9도)임.
- 대지진과 함께 발생한 대형 쓰나미(해일)는 동북지역을 덮쳤으며, 관동지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음.
-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손상을 입으면서 사태가 크게 악화됨.

그림 1. 3.11 대지진의 진앙지와 피해지역



주: 1) 진앙지에서 가까운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현의 피해가 현저함.
2) 3.11 대지진 이후에도 M7.0 이상의 여진이 3회, 6.0 이상의 여진이 36회, 5.0 이상의 지진이 298회 나타난다.
자료: 미국지질조사국(USGS), 3월 20일 발표.

-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대지진은 관동대지진(1923. 9. 1; M7.9)과 한신대지진(1995. 1. 17; M7.3)임.

- 관동대지진은 동경을 포함한 관동지역에 당시 45억 엔(국부의 10.5%)의 피해를 초래함(사망·행방불명자 142,800명, 부상자 103,733명, 가옥소실 447,128채).
- 한신대지진은 한신지역이라 불리는 일본 남부 고베시를 중심으로 한 효고현에 당시 약 10조 엔(당시 일본 GDP의 약 2.5%, 국부의 약 0.8%에 해당)의 피해를 초래함(사망자 6,434명, 부상자 43,792명, 가옥소실 104,906채).

표 1. 1900년 이후 발생한 일본의 주요 대지진

시기	지진명	M	인적 피해	피해 지역
1923.09.01	관동 대지진	7.9	사망·행방 10.5만 명	도쿄도
1925.05.23	기타타지마 지진	6.8	사망 428명	효고현
1927.03.07	기타타고 지진	7.3	사망 2,925명	교토부
1930.11.26	기타이즈 지진	7.3	사망 2,925명	시즈오카현
1933.03.03	쇼와산리쿠 지진	8.1	사망·행방 3,064명	이와테현
1943.09.10	돗토리 지진	7.2	사망 1,083명	돗토리현
1944.12.07	토나카이 지진	7.9	사망·행방 1,223명	미에현
1945.01.13	미카와 지진	6.8	사망 2,306명	미에현
1946.12.21	난카이 지진	8.0	사망 1,330명	와카야마현
1948.06.28	후쿠이 지진	7.1	사망 3,769명	후쿠이현
1983.07.12	홋카이도 남서연안 지진	7.8	사망 202명, 행방 28명	홋카이도
1995.01.17	한산이와지 대지진	7.3	사망 6,434명, 행방 3명	고베시
2011.03.11	동북지방태평양연안지진	9.0	사망 11,004명, 행방 17,339명(3.28일 현재)	동북 및 관동지역

주: 이번 3.11 대지진의 공식명칭은 아직 없으나 일본 매체에서는 '동북관동(東北關東) 대지진', 정부기관에서는 '동북지방태평양연안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자료: 日本 気象庁, 緊急災害対策本部, 위키피디아(<http://ja.wikipedia.org>).

나. 3.11 대지진 집중피해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

- 이번 3.11 대지진의 집중 피해지역인 4개 현이 일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GRDP 기준)은 6.2%이고, 인구비중은 6.8%임.
-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이상 동북지역), 이바라키현(관동지역)의 경제비중은 각각 0.9%, 1.6%, 1.5%, 2.2%임.

표 2. 집중피해 지역의 경제적 특징

	GRDP(%)	인구(%)	산업구조(%)		
			1차	2차	3차
이와테현	4.5조(0.9)	1.4백만(1.1)	4.0	26.0	70.0
미야기현	8.3조(1.6)	2.3백만(1.8)	1.7	21.8	76.4
후쿠시마현	7.9조(1.5)	2.1백만(1.6)	1.9	40.4	57.6
이바라키현	11.6조(2.2)	3.0백만(2.3)	2.3	40.3	57.4

주: 지역총생산액과 인구는 2007년 수치이며, () 안은 일본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内閣府(2010), 「平成19年度の県民の経済計算について(訂正)」

- 그러나 집중 피해지역에 입지해 있는 주요 업종들의 일본 내 비중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 2008년 기준 4개 현(합계)의 주요 업종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음식료 10.1%, 일반기계 9.9%, 전기기계 9.1%, 철강 7.5%, 화학 7.2%임.

표 3. 집중피해 지역의 주요 산업 현황

지역	주요 산업
이와테현	음식료 1.4%, 전기기계 1.0%, 일반기계 0.9%, 수송기계 0.7%
미야기현	음식료 2.2%, 전기기계 1.6%, 철강 1.1%
후쿠시마현	전기기계 3.8%, 음식료 1.7%, 일반기계 1.6%, 수송기계 0.8%
이바라키현	일반기계 6.8%, 철강 5.1%, 음식료 4.8%, 화학 4.8%, 전기기계 2.6%

주: 수치는 2008년 기준 일본 전체 매출액 대비 해당 현의 매출액 비중임.
 자료: 経済産業省(2011), 『我が国の工業-変化を続ける製造業』.

2. 일본 대지진의 피해 현황 및 대책

가. 3.11 대지진의 특징

- 이번 3.11 대지진 피해의 1차적 원인은 강진과 쓰나미, 2차적 원인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라 할 수 있음.

- M9.0의 강진은 두 차례에 걸친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하였고,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전원공급 차단으로 폭발함.
-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인프라, 산업시설 피해는 물론이고, 동북지역과 일부 관동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기능 마비와 방사능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 이번 3.11 대지진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전사고로 인하여 피해 지역이 확산되었다는 점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표 4. 한신대지진과 3·11 대지진의 피해 양상 비교

	한신대지진	3.11 대지진
원인	강진(M7.3)	1차적 원인: 강진(M 9.0)과 쓰나미 2차적 원인: 원전사고
인명피해	사망 6,343명, 행불 3명	사망 11,004명, 행불 17,339명 ¹⁾
재산피해	약 10조 엔 ²⁾	약 25조 엔 ³⁾
산업분야	· 일부 중화학공업(고무제품, 조선, 제철분야) · 일본 내 타지역이나 해외 생산에는 큰 차질 없었음.	· 자동차, 전자, 정유, 철강 등 일본 주력산업의 생산시설이 파괴됨. · 조업중단 사태가 일본 전역과 일부 해외지역으로 확산됨.
인프라분야	항만(고베항), 일부 도로에 국한	· 가스·수도 단전 · 도로·철도망 파괴: 물류망 교란 · 동북지역과 관동지역 전력공급 차질
원전사고	-	· 후쿠시마 제1원전의 1~4호기 사고 발생이 방사능 위기 초래

주: 1) 3월 28일 현재, 2) 사쿠라중합연구소(1995)는 간접 피해액으로 1995년 1년간 부가가치가 3조 4,872억 엔 감소하고, 총생산액은 7조 2,974억 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음, 3) 미쓰비시UFJ은행의 3월 15일자 추정치.

자료: 필자 작성.

- 후쿠시마현 제1원전의 6기 중 1호기(3.12)와 3호기(3.14)의 수소폭발에 이어, 2호기의 노심노출 후 폭발(3.15), 4호기 화재(3.15)가 잇따름.

- 현재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문제는 관동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사태수습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

- 후쿠시마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처음으로 검출(3.12)된 후, 2호기와 3호기의 격납용기 파손으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수증기 유출가능성도 보도(3.15)됨.

- 후쿠시마현 우유(원유)와 이바라키현 시금치에서 식품위생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3.19)되었고, 도쿄와 이바라키현의 수돗물에서도 안전기준치(유아 기준)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3.23)됨.

나. 주요 분야별 피해 실태

- (인명피해) 전후 최대의 사망자행불자 발생

- 인명피해(3월 28일 기준)는 사망 11,004명, 행불 17,339명으로 집계되었고, 146,050채의 가옥도 파손된 것으로 집계됨.

- (산업피해) 주요 업종의 조업 중단이 일본 내 타지역으로 확산

- 동북지역과 일부 관동지역에 입지해 있는 자동차, 전자, 정유, 철강 공장의 조업중단이 부품조달 등의 문제로 일본 전역으로 확산

-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업체들은 동북지역의 생산설비 피해로 제품부품 조달이 일부 중단되면서 일본 내 모든 공장의 조업중단을 발표함.

- 도시바, 후지쯔세미컨덕터, 히타치제작소 등 전자업체들은 생산시설 피해와 전력부족으로 완전 조업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고 발표함.

- JX홀딩스, 코스모 등 정유업체들은 화재 발생으로 조업을 중단, 동북지역과 일부 관동지역에서 극심한 석유 부족 사태를 초래

- 철강업체들은 생산설비의 침수피해 및 물류망 파손과 전력 공급 차질로 조업을 중단한 상황임.

표 5. 주요 업종별 기업 피해 상황

업종	회사명(소재지현)	생산품목	피해 상황
자동차	간토자동차공업(이와테)	승용차	일부 파손
	닛산 자동차(후쿠시마)	엔진	일부 파손
	혼다(도치기)	자동차 부품	일부 파손
	AISIN 정밀기계(이와테)	자동차 부품	조업 중단
	도요 고무 공업(미야기)	타이어	설비 점검 중
	Central-Motor(미야기)	승용차	일부 파손
	도요타 방직 동북(미야기)	자동차 부품	조업 중단
	스미토모고무공업(후쿠시마)	타이어	일부 파손
전자	도시바(이와테)	반도체	복구 불투명
	후지쯔세미컨덕터(이와테)	반도체	복구 불투명
	소니(미야기)	카메라	복구 불투명
	니콘(미야기)	노광장치	복구 불투명
	올림푸스(후쿠시마)	내시경 기기	일부 파손
	미쓰비시전기(후쿠시마)	통신시스템	복구 불투명
	히타치 제작소(이바라키)	정보시스템	복구 불투명
	샤프(도치기)	액정TV	설비 점검 중
정유	JX日光石エネ(미야기)	가솔린, 등유	화재
	코스모(치바)	가솔린, 등유	화재
철강	신일본제철소(이와테)	철강, 조강	침수
	J F E 스틸 東日本(치바)	철강, 조강	유통거점 파손
기타	삿포로 맥주(미야기)	맥주	일부 파손
	기린 맥주(미야기)	맥주	일부 파손
	KAO(야마가타)	일용품	조업 중단

자료: 『日本經濟新聞』(2011. 3. 15) 등을 참고로 작성.

– 특히 동북지역에 집중된 전자부품, 기계·소재 부품 공장의 조업중단은 일부 해외 업체의 조업중단으로까지 파급

- 미국 GM사는 일본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조달이 정체되자 루이지애나주의 완성차 공장을 3월 21일까지 조업 중단한다고 발표(3.17)함.

■ (인프라 피해)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의 전력, 가스, 수도 공급 중단과 타지역으로 제한송전 확대

–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은 전력과 가스,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데, 가스와 수도 공급이 중단된 가구 수는 각각 45만, 100만에 이룸.(3.18 기준)

– 일본 전력회사들은 전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송전을 시행 중임.

- 도쿄전력은 3월 13일 기준으로 수요량(4,100만kW)에 비해 공급량(3,100만kW)이 1,000만kW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4월 말까지 제한송전을 실시한다는 방침

- 도쿄전력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과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서 제한송전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부분적으로 시행 중임.

다. 일본정부의 대응 현황

■ 일본정부의 정책대응은 금융시장 안정화, 복구 자원 조달,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

–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본은행은 3월 14일 사실상 제로 금리 정책(무담보콜금리 0~0.1% 유도)을 유지하고, 자산매입금을 5조 엔 추가(회사채·CP 등 매입목적, 35조 엔 → 40조 엔)하였으며, 22조 엔의 긴급자금도 공급함.

- 3월 15일에는 지진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중도 환매를 허용하였고, 3월 18일에는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G7과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함.

– 일본 재무성은 국채발행보다는 세출 전환, 연금재원 전용 등을 통한 복구 자원 조달을 고려하고 있음.

- 민주당 정권의 주요 정책공약인 어린이수당(2.2조 엔), 고속도로 무료화 및 고교무상화(5,200억 엔), 농가호별소득보상(6,000억 엔)을 철회하고, 예비비(1.36조 엔)를 활용하면 우선 약 4.7조 엔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초연금의 일부(2.5조 엔)를 복구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보증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 대출 신속화, 담보 간소화 등을 실시함.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기업대책연락본부를 설치함.

■ 그러나 피해수습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팽배

– 야당 측은 정부의 미흡한 정보공개가 불신을 조장했다고 비판하며, 구호물자 전달 지연사태를 질타(3.15)함.

- 일본 정부는 긴급재해대책본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 피해자 생활지원특별본부 등을 잇따라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조직 난립이 지휘체계 혼선과 현장 담당자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3.20)됨.
- 특히 원전 사고 대응과정에서 총리,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3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연일 시행착오가 거듭되었고, 현장정보 수집과 공개도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3. 한신대지진 사례

가. 일본정부의 재정 부담

- 일본정부는 한신대지진 관련 대책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위기에 대응함.
- 한신대지진 발생 후 1994년도 제2차 추경예산(1조 371억 엔) 편성(1995.2.28)을 시작으로 1999년도까지 총 5조 200억 엔의 복구예산을 투입함.
- 단, 지자체(효고현과 고베시)의 재정 부담을 포함하면 총 10조 엔이고, 이 중 절반인 5조 엔이 인프라 복구에 투입됨.

표 6. 일본정부의 한신대지진 관련 재정지출 현황

(단위: 억 엔)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예산	10,371	23,375	5,832	4,035	3,789	2,755

자료: 효고현 웹사이트.

나. 경제적 영향

- 한신대지진은 고베지역의 항만과 중화학공업에 큰 타격을 입힘.
- 고베는 전통적으로 항만과 중화학공업(일반기계, 운송기계, 철강, 전기기계, 고무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음.
- 고베항은 한신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결과, 지진 직전 세계 제6위의 경쟁력이 32위로 급추락
- 중화학공업 부문 역시, 스미토모고무공업의 고베공장 폐쇄, 가와사키중공업의 일반상선 건조(建造) 공장 이전, 가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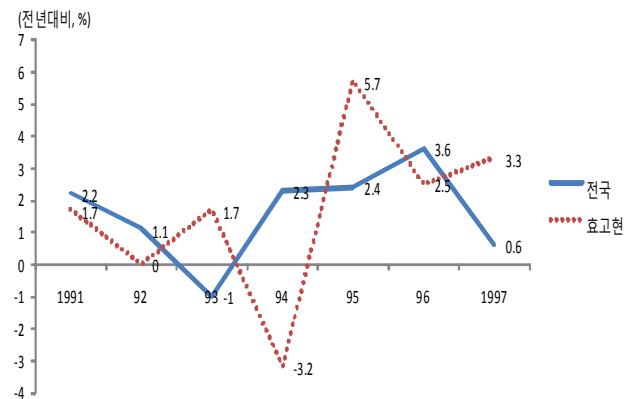
제철의 칼라강판 제조 포기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음.

■ 한신대지진은 결과적으로 '국지적' 재해에 그침.

- 한신대지진이 발생한 1995년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은 2.4%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피해지역의 생산·소비 감소 효과보다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복구 수요 증대 효과가 더 큰 데 따름.

그림 2. 한신대지진 전후의 주요경제지표

[1991년~1997년 실질 GDP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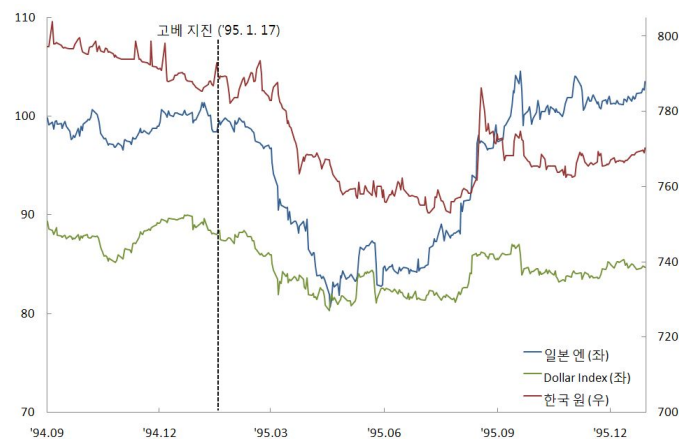
자료: 内閣府, 『經濟白書』 1995年版 및 1999年版

- 당시 효고현 이외 다른 지역의 생산능력에 여유가 있었던 점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경기회복에 주요

■ 한신대지진의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었음.

- 1995년 3월 이후 급격한 엔고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한신대지진 전후 환율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KCIF).

4.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과 전망

■ 이번 3.11 대지진은 최악의 경우 2011년 일본 GDP를 1% 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번 3.11 대지진은 피해범위 및 규모, 성격 등에 비춰 과거 한신대지진 때와 달리 정부의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총수요 진작효과가 즉각 발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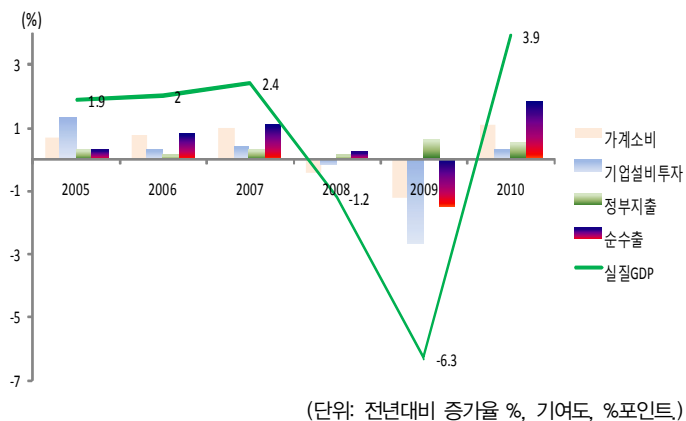
○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11 대지진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문제까지 겹쳐 가계 소비나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최근 일본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생산활동의 위축과 방사능 유출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는 일본경제에 치명적일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수출의존도(수출/GDP 비율) 추이: 1998년 9.8% → 2005년 13.7% → 2010년 15.5%

* 일본의 경제성장률에서 순수출의 기여도 추이: 2005년 0.3%p. → 2009년 1.8%p.

그림 4.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과 주요 항목별 기여도



자료: 内閣府.

- 현재 전력공급량 부족(25%)에 따른 GDP 감소 효과가 0.29%(약 1.45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노무라홀딩스)되

는 가운데, 이번 3.11 대지진으로 인해 2011년 일본 GDP는 최악의 경우 1%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임.

* 일본의 GDP 갭 추이: 2009. 1Q -9.3% → 2010. 3Q -3.1% → 2010. 4Q -3.1%(약 20조 엔의 수요부족 상태).

○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경기회복은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 증폭: 엔고, 주가하락, 저금리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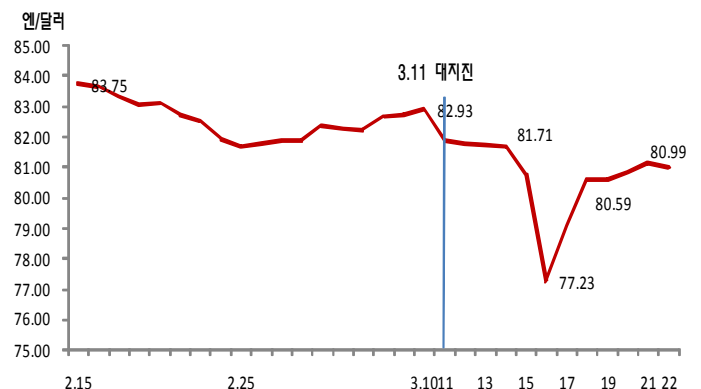
- 이번 3.11 대지진 이후, 엔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조치와 G7의 외환시장 협조 개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엔고 기대심리 확산으로 엔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 엔/달러 환율은 3월 16일 한때 달러 당 76.25엔을 기록함으로써 과거 최저치였던 1995년 4월의 79.75엔/달러를 경신함.

○ 이번 엔고는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국내 보험금 지불을 목적으로 해외자산을 대량 매각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일본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회사(日本生命保險, 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 등)는 해외자산의 대량 매각설을 부정하거나 국내 유동자산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매각 필요성을 부정(3.17)하고 있음.

그림 5. 3.11 대지진 전후의 엔/달러 환율 추이



주: 종가 기준.
자료: 일본 Exchange-Rates.or.

* 일본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외국계 포함)가 이번 3.11 대지진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2조 8,000억 엔(약 340억 달러)(단, 쓰나미에 의한 손해분은 제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

- 일본정부는 물론 다른 G7 국가들도 급격한 엔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외환시장 개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에 대한 협조개입을 통해 엔고 저지에 합의(3.18)함.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가 협조개입에 참여한다고 명시함.

○ 이는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외환시세의 과도한 변동을 감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임.

○ 3월 18일 엔/달러 환율은 한때 81엔 후반대로 상승함.

표 7.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주요 동향

시기	내용
1995년	4월 엔/달러 환율이 당시 최저치인 79.75엔/달러 기록
	G7, 환율시세의 질서 있는 반전에 합의
	7월 마일, 동시 금융완화 실시. 협조개입
	8월 대장성(현, 재무성)이 해외투·융자촉진책 발표, 마·유럽일, 협조개입
9월	엔/달러 환율이 100엔/달러 대로 하락
2003~04년 3월	일본정부,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입(총 35조 엔 매각)
2003년 9월	G7,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견제하는 공동성명 발표
2010년	9월 일본, 6년 6개월 만에 외환시장 개입: 2조 1,249억 엔의 엔화 매각
	10월 G20,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감시하기로 합의
2011년 3월	엔/달러 환율이 76.25엔/달러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3.16)

자료: 『日本經濟新聞』, 2011년 3월 18일자.

-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엔화 선호에 따른 달러 매각, 엔 매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분간 엔고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번 3.11 대지진 발생 직후 일본 주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폭락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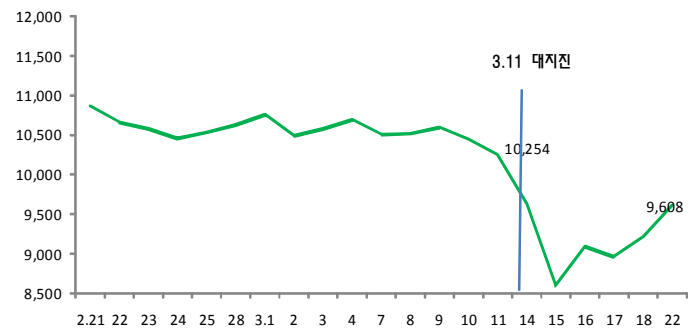
1) 일본의 지진보험 가입률 현황: 한신대지진 당시(1994년 말 기준) 전국 평균 9%(효고현, 4.8%) → 2009년 말 전국 평균 23.0% (이와테현 12.3%, 미야기현 32.5%, 후쿠시마현 14.1%, 이바라키현 18.7%, 도쿄 30.0%).

○ 일본 닛케이 225지수는 3월 11일 10,254에서 3월 18일 9,206으로 10% 정도 폭락함.

○ 업종별로 제지업(-14.5%), 부동산(-13.1%), 수산(-13.0%), 보험(-12.9%)의 주가하락이 현저하였고, 제조업 중 자동차(-8.5%), 전기기기(-6.5%), 석유(-5.4%), 철강(-4.8%)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음.²⁾

○ 이러한 업종별 편차는 임업이나 수자원이 풍부한 동북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지진보험 지급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함.

그림 6. 3.11 대지진 전후의 일본 주가 닛케이 225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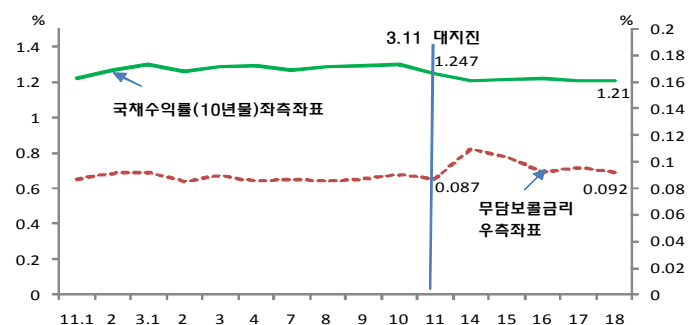
주: 종가 기준.

자료: 『日本經濟新聞』.

- 주가폭락에 이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으로 국채매입이 증가함으로써 금리가 더욱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대지진 직후 금융시장이 동요함에 따라 3월 11일 한때 단기 금리가 상승(0.087% → 0.15%)하기도 하였으나, 3월 14일 일본은행이 22조 엔의 긴급자금을 공급한 이후 장단기 금리 모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

그림 7. 3.11 대지진 전후 일본의 주요 금리 추이



■ 일본정부의 재해복구 재원조달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이번 3.11 대지진의 직접 피해액을 한신대지진의 2.5배인 약 25조 엔으로 추정할 경우, 일본정부가 확보해야 할 재해 복구 재원은 향후 5~6년간에 걸쳐 총 25조 엔, 특히 2011년에만 최소한 10조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일본 미쓰비시UFJ은행은 직접적인 재해복구 비용을 GDP의 5%(약 25조 엔)로 추정(3.15)함.

- 한신대지진 당시에는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이 86.2%(1995년)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200%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 이번 3.11 대지진을 계기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1%대의 저금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본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복구재원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 특히 막대한 국채발행은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일본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최악의 경우 일본의 재정위기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비중은 6.0%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입은 15.1%로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액 중 일본의 비중(2010년 기준): 원자재 12.8%, 자본재 21.9%, 소비재 7.7%

- 대일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엔고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출환경은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음.

* 2011년 일본의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영향은 -0.13%p.로 말레이시아(-0.47%p.), 베트남(-0.36%p.), 태국(-0.30%p.)보다 낮으나, 중국(-0.12%p.), 미국(-0.02%p.)보다는 높음(미즈호증권리서치&컨설팅, 3.17).

- 현재 일본 내 원전사고 여파로 식품, 생수, 야채와 같은 생필품의 대일 수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 특수(特需)로 해석됨.
- 반면,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조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향후 수개월 사이에 조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조달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³⁾
- 특히 플라스틱제품, 열연강판, 반도체제조용 장비, 직접회로 반도체, 기타 화학공업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자동차부품, 광학기기부품, 판유리와 같이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조업차질이 우려됨.

5. 시사점

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11 대지진 발생 이후의 엔고 추세는 원화가치의 약세를 초래

- 3월 18일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외환시장 협조 개입 이후에도 원화 약세 추이가 지속되고 있음.

* 원/100엔 환율 추이: 1,358.36원(3.11) → 1,377.25원(3.14) → 1,434.9(3.17) → 1,386.47(3.18) → 1,384.15(3.24)

- 엔고에 따른 원화 약세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원유가 등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재로도 작용할 것임.

■ 이번 3.11 대지진은 대일 수출보다는 수입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나. 대응 방향

■ 우리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향후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번 3.11 대지진은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과 원전사고가 겹쳐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물론 일본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매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투자자들의 국내 보유자산 매각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3.11 대지진은 단기적으로 일본 국내수요 감소로 인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복구수요 증가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확산 →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확대 → 유가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이와 관련하여 추후 발표 예정인 「일본 대지진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가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참고.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2011. 3. 30

-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엔고추세가 강화될 경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같은 단순한 수치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유의해야 함.

-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대지진 복구과정에서 향후 5년간, 현재의 200% 이상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막대한 대외순자산 보유로 국가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국채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어 기재 시 국제신용등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전략 수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⁴⁾

-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14기의 원전을 증신설한다는 기존 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함.
-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세계 5대 원자력 강국(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들은 대부분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기존 원전의 폐쇄나 신설계획 폐지 같은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특히 프랑스는 원전의 안전성 감독은 대폭 강화하겠지만 원전에 대한 의존도(78%)는 향후 20~30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원전수출 계약을 체결함(3.15).

■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적이었으나,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측면도 있음.
- 한·일 FTA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원전사고 여파로 농수산업 부문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농업분야의 대외개방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플랜트 분야와 같이 제3국의 한·일 기업간 협력 움직임도 일본 측의 자금사정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는 양국 기업 간 상호보완관계 유지,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은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 구호물자 제공이나 모금활동은 양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KIEP**

4)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 예정인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주요국의 원전에 대한 시각 변화와 시사점(가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참고.